

6년 만에 호암상 행진 JY... 인재 확보로 경영 혁신 도모

(삼성전자 부회장)

‘인재 제일’ 철학 계승 의지 행보
대규모 투자 이어 인사 소문 솔솔
가석방 꼬리표, 해외출장 족쇄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2 삼성호암상 시상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예술상 김혜순 시인, 사회봉사상 하트-하트재단 오지철 회장, 신인숙 이사장, 공학상 차상균 서울대 교수 부부, 김황식 호암재단 이사장. 뒷줄 왼쪽부터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 카이스트 장석복 특훈교수, 과학상 물리·수학부문 오용근 포스텍 교수 부부, 의학상 키스 정 하버드대 교수 부부.

/호암재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려움 속에서도 본격적으로 대내외 경영을 재개하는 모습이다. 악화되는 경영 환경에 혁신을 지체할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6월 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호암상 제32회 시상식에 참석했다.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호암상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호암상은 이병철 창업주가 1990년 제정한 상으로, 시상식은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주요 연례 행사였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사법리스크로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2017년부터 한동안 발걸음을 하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아직 가석방 상태인데다가 재판과 관련해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호암상 시상식에 참여한 이유는 ‘인재 제일’ 철학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전세계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호암상 수상자들을 직접 격려하며 인재 확보 의지를 드러

냈다는 것.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초 사옥에서 팻 겔싱어 인텔 CEO를 만나기도 했다. 양사 주요 경영진들이 배석한 가운데,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PC 및 모바일 등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는 설명이다.

오는 7월 열리는 ‘앨런&코 컨퍼런스’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컨퍼런스는 글로벌 국제 비즈니스 회의로,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아마존 등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는 사교 모임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부회장은 2002년부터 이 행사에

참석하면서 회사 성장 기회를 마련하고 ‘민간 외교관’으로도 활약할 수 있었다. 2017년 법정에서 이 행사를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그러나 결국 5년간이나 참석을 못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유지하기도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때문에 올해에는 참석을 강행할 수 있다는 예상이 이어진다.

5년간 450조원 규모 대대적인 투자를 발표한 데 이어, 삼성전자에서는 대대적인 인사 소문도 돌고 있다. 한동안 안정적 경영을 위해 최소한의 인사만 진행해왔는데, 혁신 필요성이 높아지면

서 임원진을 대거 개편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과제도 여럿 남았다. 다음달 미국 텍사스에서 열리는 파운드리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야 한다. 해외 투자로는 최대 규모인데다가, 현지 정관계 관심도 높은 이유다.

당장 의미 있는 M&A가 시급하다. 최근 반도체 산업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인수·합병이 활발해졌다. 삼성전자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M&A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2017년 하반기 이후 별다른 시도를 하지 못한 상태다. 이 부회장이 자리를 비웠던 탓에 결단을 내리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Arm을 둘러싼 투자 경쟁에도 나서야 한다. SK에 이어 퀄컴도 Arm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최근 Arm이 엔비디아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된 상황, 관련 업계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공동 투자 가능성이 높다. 모바일과 IoT 등 분야에서 Arm 역할이 큰 만큼, 삼성도 참여하지 못하면 자칫 비메모리 경쟁에서 소외될 수 있다.

문제는 사법리스크다. 이미 이 부회장은 지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행사에도 재판으로 참석을 하지 못한 바 있다. 앞으로도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차례 해외 출장이 필수적이지만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석방’ 꼬리표도 걸림돌이다. ‘취업 제한’ 논란으로 경영에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 물론 글로벌 출장과 행사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탓이다.

이에 따라 재계가 다시 한 번 정부에 이 부회장 사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주요 경제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만날 예정이기 때문. 그 밖에도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규제 철폐를 내세운 정부도 빠르게 조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尹정부 ‘수소경제’ 발맞춰 업계, 생태계 선점 속도낸다

지난달 수소법 개정안 통과
국내 대기기업들, 수소사업 추진

이전 정부에 이어 새 정부도 ‘수소’를 에너지 신산업의 큰 축으로 삼고 나아가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에서 나오는 청정수소를 공급하기도 해 수소에너지 관련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소는 흔하면서도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탈탄소 시대의 대표적인 에너지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탈탄소 정책이 후퇴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업계의 시선은 윤석열 정부 ‘11대 국정과제’ 발표와 함께 한풀 꺾였다.

윤 대통령은 11대 국정과제에 에너지 부문에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하여 세계 1등 수소산업 육

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속적인 수소 경제 구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구 엑스코(EXSCO)에서 열린 ‘제28차 세계가스총회(WGC)’에서 “수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소 생산 기반을 확보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업계 전망은 더욱 밝아졌다. 수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청정수소와 수소발전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청정수소 사업 발전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정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에 따라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해 수소구매사업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의무적으로 구매·공급할 것을 명시했다.

정치권이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자 국내 대기기업들도 수소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롯데케미칼은 수소에 ‘통 큰 투자’를 한 기업 중 하나다. 롯데케미칼은 기존 석유화학 기업에서 수소·배터리·고부가가치 소재 등을 아우르는 종합화학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발표했다. 2030년까지 120만 톤 규모 청정수소 생산을 목표로 수소 사업에 총 6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롯데는 현재 국내 수소 유통 물량의 20%, 국내 암모니아 공급 70% 이상을 공급하고 있어 이미 수소 사업

에서 유리한 기반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시장 평가도 있다.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대표 겸 수소에너지사업단장은 “최적의 인프라와 해외 사업 경험이 있고, 아랍 코·포스코 등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중”이라며 “충분한 투자 여력의 강점을 토대로 수소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자신했다.

SK그룹의 에너지 계열사 SK E&S는 수소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블루수소와 그린수소의 중간단계인 ‘청록수소’의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청록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아 블루수소 등과 함께 친환경 청정수소로 불린다. 작년 10월 세계 최초로 청록수소 상업화에 성공한 미국 모놀리스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롯데케미칼은 ‘Every Step for Green’이라는 슬로건으로 고부가 스페셜티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며 수소에너지, 전지 소재, 리사이클·바이오플라스틱 등 그린(Green) 사업을 더 확장할 방침이다.

/롯데케미칼

했다. GS에너지는 탈탄소 수소경제 시대의 원유로 주목받고 있는 블루암모니아 확보에 나섰다. GS에너지는 지난해 말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의 블루 암모니아 개발사업 지분 10%를 확보했다. 이밖에 한화, 두산, 현대차 등도 향후 투자 계획에 수소 관련 내용을 넣고 사업을 확장 청사진을 공개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新산업 못 따라가는 법... “적절한 수준 규제 필요”

» 1면 ‘대형마트 족쇄’서 계속

무법지대에 소비자 보호 없어

지난 3월 홈플러스 측에 의하면 인천 지역 리뉴얼 개점 점포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올랐다.

홈플러스측도 유료방송사업자에 내는 송출수수료가 갈수록 줄어드는 TV 시청률을 고려했을 때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미 홈쇼핑 매출의 절반 수준에까

지 이르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랜드마크’가 해당 지역 유동인구 증가를 일으키는 큰 요인이 되면서 오히려 대형마트나 대형 쇼핑몰이 인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대기업 유통사가 PB상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까지 모두 아울러 납품업체로 안고 있고 가맹점 운영사들의 경우 소상공인 보호가 곧 자사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만큼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빈틈 노려라’... 빠르게 변하는 지형에 계속 등장하는 무법지대

유통법이 아닌 다른 법의 개정, 신기술을 발전과 적용 등은 신산업을 탄생시켰지만 법률이 제때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법률 안에 아예 언급조차 없는 경우도 있어 시장 플레이어들의 형평성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도 어렵다.

국산 와인인 전통주일까 아닐까. 현행법에서는 전통주다. 2018년 주류세 개정 후 크고 작은 주류제조사가 늘었

지만 법안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온라인에서 술은 판매할 수 없는데, 기준이 제조지역·제조자인 까닭에 막걸리가 전통주로 팔리지 못하고, 와인이 전통주 행세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라방’으로 불리는 라이브커머스 또한 현재 무법지대에 놓여 소비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방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하며 비대면 쇼핑 붐을 타고 크게 성장했지만 현재 통신중개업자(플랫폼)에 영상 녹화 등 보존 의무가 없다. 이 탓에 점점을 통한 허위·과장광고 적발만 가능할 뿐, 소비자가 라방 상품에 대해 피해를 입어도 입

증하기 어렵다.

라방을 진행하는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라방은 TV홈쇼핑과 달리 업체 선정이나 광고표현에 대한 사 전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업계 내부에서도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다.

여기에 더해 T커머스 업계가 TV채널을 활용한 라방을 확대하면서 TV홈쇼핑 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 중이다. TV홈쇼핑이 내는 방송발전기금 의무와 심의 부담에서 T커머스의 라방은 자유롭기 때문에 TV홈쇼핑 등이 이들과의 경쟁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서현 기자 seoh@